

Kim, Dohyung

**Research Report**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Focus, No. 75(k)

**Provided in Cooperation with:**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Sejong

*Suggested Citation:* Kim, Dohyung (2016)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Focus, No. 75(k),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Sejong

This Version is available at:

<https://hdl.handle.net/10419/200876>

**Standard-Nutzungsbedingungen:**

Die Dokumente auf EconStor dürfen zu eigenen wissenschaftlichen Zwecken und zum Privatgebrauch gespeichert und kopiert werden.

Sie dürfen die Dokumente nicht für öffentliche oder kommerzielle Zwecke vervielfältigen, öffentlich ausstellen, öffentlich zugänglich machen, vertreiben oder anderweitig nutzen.

Sofern die Verfasser die Dokumente unter Open-Content-Lizenzen (insbesondere CC-Lizenzen) zur Verfügung gestellt haben sollten, gelten abweichend von diesen Nutzungsbedingungen die in der dort genannten Lizenz gewährten Nutzungsrechte.

**Terms of use:**

*Documents in EconStor may be saved and copied for your personal and scholarly purposes.*

*You are not to copy documents for public or commercial purposes, to exhibit the documents publicly, to make them publicly available on the internet, or to distribute or otherwise use the documents in public.*

*If the documents have been made available under an Open Content Licence (especially Creative Commons Licences), you may exercise further usage rights as specified in the indicated licence.*



## KDI FOCUS

2016년 9월 29일(통권 제75호)

자료문의 | KDI 홍보팀

주소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030

Fax 044-550-0652

집필자 | 김도형 연구위원(044-550-4110)

KDI FOCUS는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

Korea'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김도형 | KDI 연구위원

“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보조금을 수혜할 때 사회보험 가입자는 15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통해 가입을 유인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부과·징수를 국세청에 일임함으로써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

## 1. 문제의 제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약 25%인 400~500만명의 근로자가 실질적인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다. 기술진보에 따른 기대여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급변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을

통해 실직에 따른 소득상실과 노후빈곤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은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그간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 왔다. 한 가지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가입률 제고정책으로서, 1995년 4대보험의 틀

\* 본고는 한국개발연구원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2016(근간 예정)의 제2편과 제7편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기술진보에 따른 기대여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급변이 예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을 통해 일시적 소득상실과 노후빈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징수행정 강화정책이 좌절되면서 2012년부터 보조금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유인정책으로 선회

을 갖춘 직후부터 줄곧 국정과제로 논의되어 왔다(한국개발연구원, 2012). 징수통합은 적은 비용으로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기관과 노조의 반발로 인해 이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sup>1)</sup>

그에 따라 정부는 정책방향을 선회하여 2012년부터 보조금 제공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각지대가 집중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덜어줌으로써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목표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알려진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연간 5천억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통한 가입유인정책이 실제로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더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가입자 증대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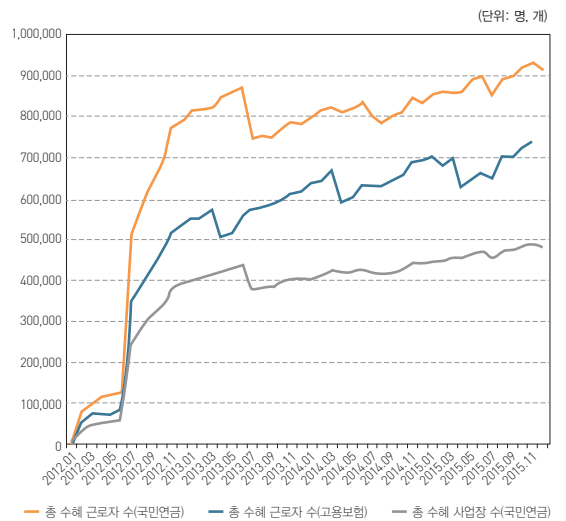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16개 광역시도의 일부 시,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12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애초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의 33.3%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1년 67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원사업장 요건이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완화되고,

〈표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요건 변화(2012~16년)

시기	사업장 규모	월평균 보수	지원비율
2012년 2~6월 (시범사업)	10인 미만	35~105만원	50%
2012년 7~12월		105~125만원	33.3%
2013년 1~3월		110만원 미만	50%
		110~130만원	33.3%
2013년 4~12월		130만원 미만	50%
2014년 1~12월		135만원 미만	-
2015년 1~12월	140만원 미만	-	
2016년 1~12월	-	-	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주: “-”은 위와 같음을 의미.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6).

〈그림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 수 변화 (2012~2016년 1월)



자료: 국민연금DB; 고용보험DB.

보험료 지원비율은 33.3%에서 33.3~50%로 인상되었으며, 사업의 전국적 실시 시기도 2012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2012년 사업예산도 2,650억원 규모로 4배 가량 증액되었다.

2012년 사업 시행 이후에도 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지원대상 근로자 보수 상한은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 인상되었고, 지원비율도 2013년 4월부터 50%로 일원화되었다(표 1 참조).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의 수

1)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부담률이 높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은 당면가입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징수인프라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준 수혜 근로자 수는 911,518명, 수혜 사업장 수는 482,760개에 이른다(그림 1 참조).

### III.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가입증대효과와 사중손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수혜자 수가 약 90만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견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이지만, 수혜자가 모두 사업효과로 인한 사회보험 가입자인 것은 아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었다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나 보조금 지원 덕분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조금을 수혜한 근로자들로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주요 정책대상이다. 두 번째 집단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무관하게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것이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수혜한 근로자들이다.

정부가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집단에 국한하여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정보계약으로 인해 두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집단에 대한 재정지출은 사업목적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사업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비용이

라는 점에서 흔히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부른다.<sup>2)</sup>

사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집단이 얼마나 되는지를 식별하여 사중손실을 계산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는 점을 활용하여, 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 속한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 패턴을 비교하면, 사업의 실제 수혜자들 가운데 정책대상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sup>3)</sup>

2011~13년 시범사업 실시지역과 미 실시 후보지역에 속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약 90만개에 이르는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 가운데 첫 번째 집단, 즉 보조금 덕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중은 2013년 6월 기준 1.5%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6). 이는 정부가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때, 사회보험 가입자는 15명 증가함을 의미한다. 결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라는 사업목표에 기여하지 못하고, 저임금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소득이전에 쓰이고 있다.<sup>4)</sup>

유럽에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제도가 흔히 고용과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일각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고용증대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즉, 두루누리 사회보험 역시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 보험료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동비용 감소에 따른 사용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2015년 12월 말 현재**

**지원 근로자 수는 91만여 명,**

**사업장 수는 50만 개에 육박**

**정부가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칭지원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15명 증가**

**즉, 사업예산의 98.5%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하지 못한 채**

**단순 소득이전으로 지출**

2) 사업의 사중손실은 사업목적과 무관한 재정지출이라는 의미로 관련 문헌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Harberger's triangle)을 의미하는 공공경제학적 사중손실 정의와 구분된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가입자 수 증대효과를 추정할 대표적인 두 연구는 상이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 수준 월별 자료를 이용한 유경준 외(2016)는 2~4%의 가입증대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통제지역보다 시범지역 가입자 수가 크기 때문에 지역 수준의 분석은 과대추정의 우려가 있다. 또한 본사업 효과 추정 시 10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이 대등하다는 무리한 가정에 의존하여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이병희(2014)는 가입률이 1% 증가함을 보고하였으나 추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추정 결과(한국개발연구원, 2016)는 사업장 수준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시범사업지역과 후보지역 간 차이에 따른 편의를 최소화하고, 두 차례의 정책 변화(시범사업, 본사업)를 모두 활용하여 추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실시된 본사업 평가 시 발생하는 통제집단 설정의 문제를 회피했다는 점에서 유경준 외(2016)와 차이가 있다. 또한 추정 결과를 기초로 사업의 사중손실을 계산함으로써 사업성과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4) 추정된 사중손실 크기를 201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에 적용하면, 사업예산 5,202억원 가운데 79억원이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대에 이용되고, 나머지 5,123억원은 사회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단순 소득이전 형태로 지출되는 셈이다.

자의 노동수요 증가가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 수 증대효과 추정과 유사한 방법론을 이용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고용증대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한국개발연구원, 2016).<sup>5)</sup>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제한된 성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보조금 지급 범위와 수준을 고려할 때, 보조금 수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보조금의 편익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으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한다. 사회보험료를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부가세, 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 부담 때문에 정규인력 고용을 기피할 수 있다.

둘째, 연금보험료 매칭지원의 효과에 관한 여러 실증연구들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유인효과는 대체로 그 크기가 작을 뿐더러, 교육받은 고소득 자산가들만이 제한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지적한다.<sup>6)</sup>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금전적 인센티브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저임금근로자들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고용증대효과와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제한적이고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높은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 영세사업장과 같이 비정규인력이 탄력적으로 공급되는 노동시장에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이 노동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각지대가 해소된

연후에 고용확대정책으로서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가 고려되는 것이 순서임을 시사한다.<sup>7)</sup>

#### IV.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수혜자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유의미한 고용증대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으로 간주하더라도, 소득이전의 최대수혜자가 사용자들이라는 점,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수반한다는 점은 정당화되기 어렵다.<sup>8)</sup> 근본적으로는, 보조금을 통한 가입유인정책이 임의가입제도가 아닌 당연가입 사회보험에 적용될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가 아닌 개인선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sup>9)</sup>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고려하면, 보조금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유인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과 무관하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가 98.5%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원이 계속가입자보다 신규가입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급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가입유인효과를 극대화하고, 한시적 지원을 통해 사중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방향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서 네덜

5) 이는 추정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가입자 수 증대효과가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고용이 아닌 미가입 근로자의 가입전환을 통해 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6) 이를테면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에 반응하는 인구가 소득수준 상위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Chetty *et al.*, 2014).

7)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터키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Belcher *et al.*, 2010).

8) 예컨대 9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보수 100만원인 근로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1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보수 100만원인 근로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의 문제는 사업 시행 이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도 지적되어 재고가 요청된 바 있다(환경노동위원회, 2011).

9) 실제로 연금보험료 매칭지원제도는 당연가입 공적연금이 아닌 임의가입 사적연금제도에서 저축장려수단으로 흔히 이용되며, 저축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확정급여형 제도에 보험료 매칭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Holzmann *et al.*, 2013, p.5).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정책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강화할 우려

란드가 보여준 행보는 시사적이다. 네덜란드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1996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가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대규모 사중손실 문제로 2005년에 사업을 폐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06년부터는 징세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국세청에서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소득파악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세청에 부과·징수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sup>10)</sup> 이를 통해 사회보험 당연가입의무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것이다. ■

소득파악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징수를  
전담함으로써  
징수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

## 참고문헌

- 유경준·강창희·최바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론의 적용」, 『경제학연구』, 제64집 제1호, 2016, pp.73~106.
- 이병희,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분석 및 중장기 사업개편방안」,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4.
- 이용하·김원섭·최인덕,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 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15-08, 국민연금연구원, 2015.
- 한국개발연구원,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관리체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2012.
- 한국개발연구원,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2016(근간 예정).
- 환경노동위원회, 「2012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 11.
- Betcherman, Gordon, N. Meltem Daysal, and Carmen Pages, "Do Employment Subsidies Work? Evidence from Regionally Targeted Subsidies in Turkey," *Labour Economics*, 17, 2010, pp.710~722.
- Chetty, Raj, John N. Friedman, Soren Leth-Petersen, Torben Heien Nielsen, and Tore Olsen, "Active vs. Passive Decisions and Crowd-Out in Retirement Savings Accounts: Evidence from Denmark,"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3), 2014, pp.1141~1219.
- Holzmann, Robert, Richard Hinz, and David Tuesta, "Early Lessons from Country Experience with Matching Contribution Schemes," in Richard Hinz, Robert Holzmann, David Tuesta, and Noriyuki Takayama (eds.), *Matching Contributions for Pensions*, The World Bank, 2013.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DB.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10) 2014년부터 사업장 정보와 일용직 근로소득 정보가 포함된 일용근로소득 명세서를 국세청과 각 사회보험 공단이 공유하기 시작하였으나, 소득자료가 공단에 보고되는 시차, 사용자의 불성실 신고 등으로 인해 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현저히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용하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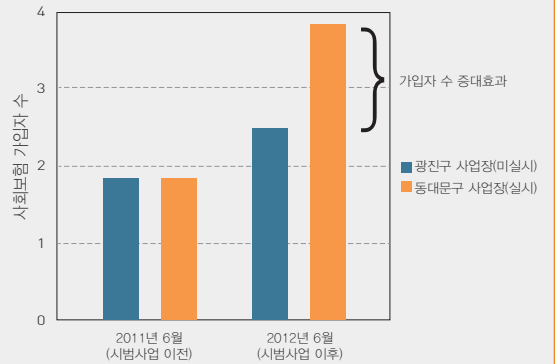
[Box] 사회보험 가입증대효과 추정 및 사중손실 계산

보조금에 의한 가입자 증대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수혜한 근로자들이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했을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물론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조금 지원사업 적용 여부를 제외하고 서로 유사한 근로자들 간에 사회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하면, 보조금이 사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경우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16개 광역시도의 일부 시, 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가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동대문구에서는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시범사업 후보지역이었던 광진구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다. 만일 시범사업 전후 동대문구에 속한 100개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평균 2명 증가한 데 반해, 광진구의 100개 사업장에서는 평균 1명 증가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가입자수에 미친 효과는 사업장당 1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 참조).

이러한 추정법이 유효하려면, 첫째 시범사업지역의 선택이 그 지역에 속한 개별 사업장의 가입자수와 무관하고, 둘째 실시지역과 미실시지역 간에 가입자 수 추세 변화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실제 시범사업지역 선정과정에서는 임금근로자 수가 고려되었으나, 분석에 사용된 비교집단은 2순위로 탈락한 후보지역에 국한되므로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았다. 또한 가입자 수 증가 추세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인구, 광역시도별 가입자 선형 추

(그림 2) 이중차분법 개념도



세, 그리고 개별 사업장 특성 등을 통제함으로써 두 번째 요건 역시 성립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1~13년간 시범사업 실시지역과 후보지역에 속한 약 30만개에 이르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자료는 국민연금 행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구축하였다. 2012년 2월 시범사업 실시, 2012년 7월 본사업 실시라는 두 번의 정책 변화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시행 이전인 2011년 6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 본사업 시행 이전인 2012년 6월, 본사업 시행 이후인 2013년 6월의 사업장별 가입자 수를 관측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차분법으로 알려진 이러한 접근을 활용하면, 사업이 실시된 사업장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사회보험 가입자가 몇 명 증가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추정된 가입자 증가분을 실제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 수에서 차감하면 보조금과 무관하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수혜자 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출이 사업목적상 사중손실의 크기이다.





